

ASAN REPORT

새 출발점에 선 한미관계: 대미(對美) 여론과 한미관계 시사점

여론연구프로그램

2017년 6월



Asan Report

새 출발점에 선 한미관계:
대미(對美) 여론과 한미관계 시사점

여론연구프로그램

2017년 6월

아산정책연구원

우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담론을 주도하는 싱크탱크를 지향합니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정책-철학 등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및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외교와 유관분야 전문가를 육성해 우리의 미래를 보다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여론연구프로그램

한국 사회에서 민주적 소통의 의미가 강조되면서 여론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정책입안자는 국내 여론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합니다. 또한 대중은 여론조사를 통해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연구프로그램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한국 여론 연구의 산실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 여론조사와 고급 통계분석 등을 통해 국내 여론변화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여론 수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입니다.

저자

김지윤

김지윤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계량분석센터 여론연구프로그램 연구위원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선거와 재정정책, 미국정치, 계량정치방법론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Cognitive and Partisan Mobilization in New Democracies: The Case of South Korea” (with Jun Young Choi and Jungho Roh, 2015, *Party Politics*), “The Party System in Korea and Identity Politics” (in Larry Diamond and Shin Giwook eds. *New Challenges for Maturing Democracies in Korea and Taiwan*, 2014, *Stanford University Press*),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비 지출의 정치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병하 공저, 의정연구, 2013),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분배의 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2010), 『Political Judgment, Perceptions of Facts, and Partisan Effects』 (*Electoral Studies*, 2010), 『Public Spending, Public Deficits, and Government Coalitions』 (*Political Studies*, 2010) 등이 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대학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미국 MIT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지냈다.

강충구

강충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계량분석센터 여론연구프로그램 선임연구위원이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연구 관심분야는 양적연구방법, 조사설계, 통계자료 분석 등이다.

이지형

이지형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외교안보센터 선임연구위원이다. 미국 퍼시픽 포럼(Pacific Forum) CSIS Young Leader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 관심분야는 동북아시아 안보, 미국 외교정책, 북한 문제, 경제제재이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Dartmouth College)에서 정치학(Government)을 전공했으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목차

들어가며	07
I. 한국인의 대미(對美) 인식	08
1. 주변국 호감도	08
2.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	09
3. 한국인의 두 시각: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11
II. 한미동맹의 도전	13
1. 한미정상회담에서 주력해야 할 점	13
2. 한반도 사드 배치와 국회 비준	14
3. 대북(對北) 문제 접근법	20
III. 새 출발점에 선 한미관계	22
1. 한미관계 전망	22
2. 한국의 협력 상대	24
나가며	25
부록	27

그림

[그림 1] 주변국 호감도	09
[그림 2]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	10
[그림 3] 호감도 격차: 미국 대(對)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	12
[그림 4] 한미정상회담에서 주력해야 할 점	14
[그림 5]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인의 의견	15
[그림 6] 사드 배치 국회 비준 필요성	18
[그림 7] 사드 배치 입장별 국회 비준 필요성 평가	19
[그림 8]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의견	20
[그림 9]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견	21
[그림 10] 문재인 정부 한미관계 전망	23
[그림 11] 한국의 협력 상대	24

표

[표 1]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와 미국 호감도의 관계	13
[표 2] 연령대별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 의견 변화	16
[표 3] 연령대별 한국의 협력 상대	25

들어가며

트럼프 미(美) 대통령의 취임,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중 간 갈등, 중국의 경제 보복조치,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 등으로 한반도 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의 실패를 선언하고, '최고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를 대북(對北) 정책 기조로 확정했다. 북한은 2016년 두 차례 핵실험에 이어 한국의 정권 교체 이후에도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며 대북 강경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중국은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표하며 조심스럽게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지만, 올해 초 사드 배치를 두고 내린 보복 조치의 파장은 여전하다.

지난 5월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측의 속내는 복잡한 듯 하다. 매티스 장관과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던 딕 더빈 상원의원은 사드 배치를 서두르지 않는 한국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원하지 않는다면 사드 관련 예산을 다른 쪽으로 배분할 생각이다"라고 했다. 가드너 상원의원도 사드 배치를 국회 비준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한국 정부측 입장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미(美) 외교가 전반에 진보성향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가 퍼져 있다.

이 보고서는 6월 말 치러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인이 미국과 한미동맹, 한미관계 관련 현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짚어봤다. 한국인들이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지도자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주요 외교 현안에 어떤 입장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분석 결과,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는 전임 오바마 대통령보다 현저히 낮았지만 미국 호감도에는 아직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미국 호감도는 다른 주변국에 비해 여전히 높았다. 그동안 한미 양국이 동맹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해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중국 호감도는 사드 배치 관련 갈등으로 올해 3월 크게 하락한 후 회복하지 못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선 최근까지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지면서 찬성 여론이 반대 보다 많았다. 그러나 사드 배치가 박근혜 정부에서 서둘러 추진된 탓에, 응답자 중 다수가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 필요성에 동의했다. 결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개성공단 재개는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나뉘지 않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변화를 전제하는 보수적 접근을

선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망이 부정적 전망을 압도했다. 정권 초 높은 문재인 대통령 호감도가 한미관계 등을 포함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국내외 한미동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한국인은 미중경쟁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 협력 상대로 중국보다 미국을 선호했다. 또 6월 말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무엇보다 양국 정상 간 신뢰관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 즉, 특정 이슈에 대한 해결보다는 두 정상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져있었다. 이는 한미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 향후 세부적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I. 한국인의 대미(對美)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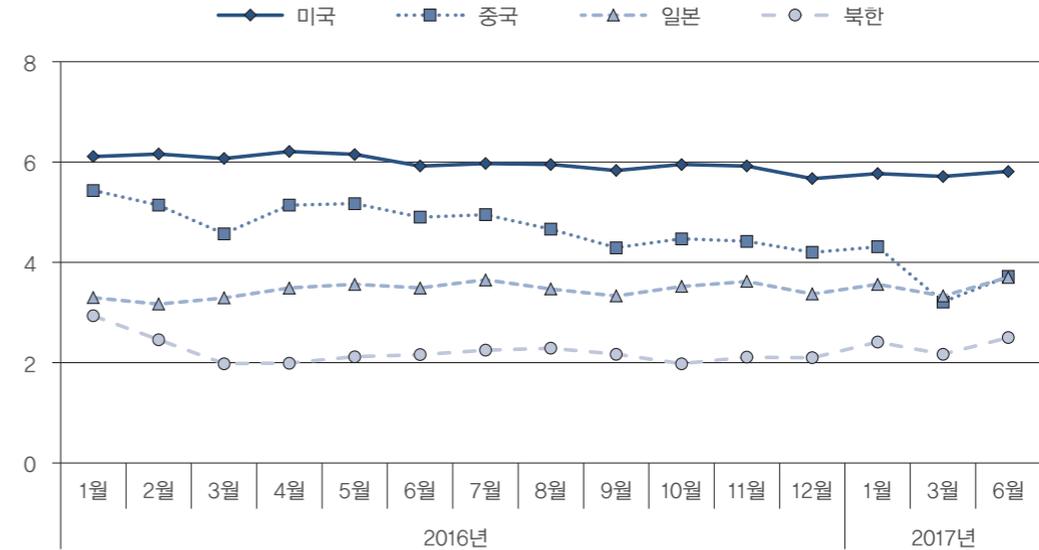
1. 주변국 호감도

먼저 미국 호감도(0점= 전혀 호감이 없다, 10점= 매우 호감이 있다)는 5.81점을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 모습을 보였다. 사드 배치 관련 논란, 트럼프 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미국 호감도는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6점대 초반을 기록했던 2016년 초와 비교하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5점 후반대(5.81점)로 조사 대상국 중 유일하게 5점(중립) 이상을 유지했다.

2017년 3월 최저치(3.21점)를 기록한 중국 호감도는 6월 3.72점으로 0.5점 상승했다. 3월 당시 사드 보복조치로 한국인의 대중(對中) 인식이 크게 악화되면서 중국 호감도는 급격히 하락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이 보복조치를 유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 호감도 상승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호감도(3.70점)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보기 어렵다. 중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과거 4~5점대 호감도를 기록하며 미국을 추격했던 시기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일본 호감도는 양국 간 갈등이 크게 부각되지 않으면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했다. 6월 들어 3.70점으로 3점대에서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보였다.

북한 호감도는 1점 후반에서 2점 초반으로 큰 변화 없이 최하위를 유지했다. 2016년 두 차

[그림 1] 주변국 호감도¹⁾ (단위: 0~10점)



레 핵실험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수 차례 미사일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감정이 안 좋을 수 밖에 없었다.

2.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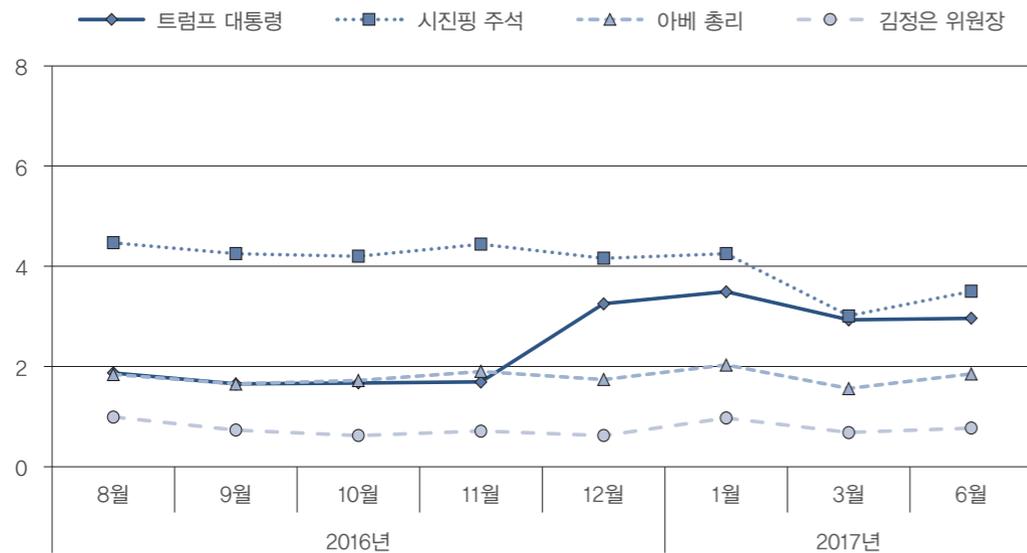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 조사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미(美)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가 미국 호감도에 비해 매우 낮았다는 점이다. 2016년 미 대선 직후 트럼프 호감도는 3점대 중반까지 올랐었다. 취임 직전인 2017년 1월 최고치인 3.49점을 기록하고 최근 연속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호의적 태도를 보인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다. 선거기간 내내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국가로 치부했고, 지난 4월에는 사드 배치 비용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한국이 부담하라는 발언을 언론을 통해 두 차례나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며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는 2.96점으로 3점대도 무너졌다.

1. 아산정책연구원 정기조사(2016년 1월~2017년 6월). 2013년 1월 이후 매월 실시했던 주변국 및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 조사는 올해부터 5회(1, 3, 6, 9, 12월)로 조사횟수를 조정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 호감도는 앞서 살펴본 중국 호감도와 유사한 패턴 변화를 보였다. 2016년 4점대 중반을 기록했던 시진핑 주석 호감도는 2017년 3월 3.01점까지 급락했었다. 이때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가시화되면서 한국인 사이에서 대중(對中) 인식이 크게 악화된 시기였다. 한국인들은 중국뿐 아니라 시진핑 주석에게도 사드 보복조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다. 2017년 6월 조사에서 나타난 시진핑 주석 호감도는 3.50점으로, 3월보다 0.5점 가량 상승했다. 2015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치였으나 여타 주변국 지도자들의 호감도가 워낙 낮아서 호감도 순위는 가장 높았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호감도는 2016년 8월 이후 최저 0.62점에서 최고 0.99점으로 1점을 넘지 못했다. 북한과의 냉랭한 관계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일본 아베 총리 호감도는 2017년 6월 1.85점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있었다. 3점대에서 소폭 상승세를 보였던 일본 호감도와는 달리, 아베 총리 호감도는 거의 변하지 않으며 1.56점~2.03점 사이에 분포했다.

[그림 2]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² (단위: 0~10점)



2. 아산정책연구원 정기조사(2016년 8월~2017년 6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는 트럼프 후보 또는 트럼프 당선인으로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를 조사했다(0점=전혀 호감이 없다, 10점=매우 호감이 있다).

3. 한국인의 두 시각: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한미 양국은 오랜 기간 한미동맹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해 왔다. 2013년 1월부터 실시해 온 주변국 호감도 조사에서 한국인의 미국 호감도는 다른 조사 대상국보다 높았다. 한중 관계가 가장 좋았던 2015년, 중국이 미국과의 호감도 격차를 0.56점까지 좁혔던 때(3월, 미국 5.93점 vs. 중국 5.37점)를 제외하면 미국은 여유 있는 격차로 호감도에서 다른 나라를 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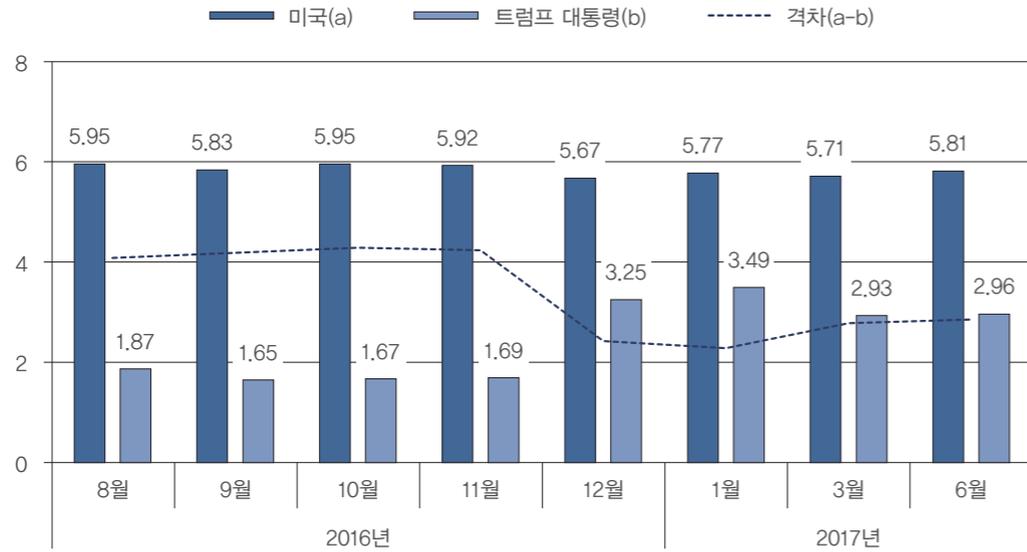
오바마 집권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인 사이에서 워낙 인기가 높았던 탓에, 미(美) 대통령 호감도가 미국 호감도를 상회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는 매우 낮았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호감도가 미국 대통령 호감도를 훨씬 웃도는 상황이 됐다. 취임 전인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가 3.49점까지 상승하며 미국 호감도(5.77점)와의 격차를 2.28점까지 줄였지만,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가 하락하면서 둘 간의 격차(6월 2.85점)는 다시 벌어졌다(미국 5.81점 vs. 트럼프 2.96점). 국가 호감도가 지도자 호감도보다 앞서는 패턴은 일본과 아베 총리 호감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³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가 낮았음에도 미국 호감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이다. 미국에 대한 평가가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국인들이 국가와 개인 즉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구분하고, 한미동맹의 유지라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사드 비용 부담과 한미 FTA 재협상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한국인의 대미(對美) 인식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매티스 국방장관, 킬러슨 국무장관의 적극적 해명이 있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트럼프의 대(對) 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부정적 언행이 거듭된다면, 한국인의 미국 호감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와 미국 호감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11점 척도(0점=전혀 호감이 없다~10점=매우 호감

3. 김지윤·강종구·이지형 (2015). "한일관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아산리포트.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일본과 아베 총리 호감도 격차에 대한 분석은 본문의 18~20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3] 호감도 격차: 미국 대(對)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⁴ (단위: 0~10점)



이 있다)로 측정된 주변국,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를 중간값(5점)을 기준으로 0~4점은 비호감, 5점을 중립, 6~10점을 호감으로 구분해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 점수에 따라 미국에 대한 호감도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1] 참조).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응답층의 미국 호감 비율은 83%나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 비호감인 응답층의 미국 호감 비율은 36.1%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이들의 미국 비호감 비율은 23.9%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미국 호감도에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 따라 미국 호감도도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정기조사(2016년 8월~2017년 6월).

[표 1]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와 미국 호감도의 관계⁵ (단위: %)

		미국 호감도		
		비호감 (n= 175)	중립 (n= 346)	호감 (n= 438)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	비호감 (n= 657)	23.9	40.0	36.1
	중립 (n= 196)	7.1	35.2	57.7
	호감 (n= 106)	3.8	13.2	83.0

II. 한미동맹의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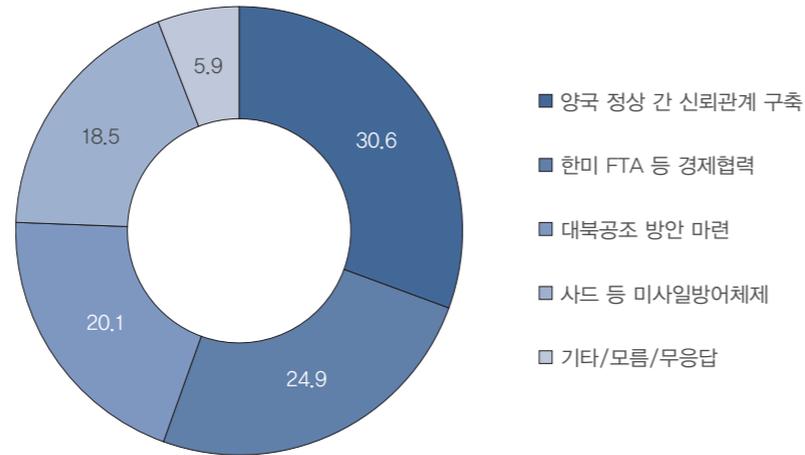
한미 간에는 한반도 사드 배치, 방위비 분담, 전작권 환수, 한미 FTA 재협상, 대북정책,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등 협의와 조율이 필요한 문제가 다수 존재한다. 최근에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배치와 대북정책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력해야 할 점을 살펴보고, 시급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드 배치와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의견을 분석했다.

1. 한미정상회담에서 주력해야 할 점

한국인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정상 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력해야 할 점에 대해 물은 결과, 30.6%는 ‘양국 정상 간 신뢰관계 구축’을 1순위로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갖는 첫 번째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정상 간 친분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시각이 짙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는 경제이슈인 ‘한미 FTA 등 경제협력’을 꼽은 비율이 24.9%였다. 북핵 문

5.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정기조사(조사기간: 2017년 6월 1~3일). ‘모름/무응답’은 결측 처리했다(n= 959).

[그림 4] 한미정상회담에서 주력해야 할 점⁶ (단위: %)



제와 관련된 ‘대북 공조 방안 마련’, ‘사드 등 미사일 방어체제’를 꼽은 비율은 각각 20.1%, 1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언론이 사드 문제를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침체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보도한 것과 달리, 한국인들은 사드 배치에 큰 방점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한미 FTA 등과 같은 경제협력을 훨씬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안보동맹과 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로 판단하고 있었고, 한미정상회담의 주제로는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언론과 한국인들이 본 한미 간 시급한 현안에는 차이가 있었다.

2.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와 국회 비준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 변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미중 간 대결이 첨예해지면서 한반도는 미중 대결의 장(場)이 되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비용부담을 언급하고, 문재인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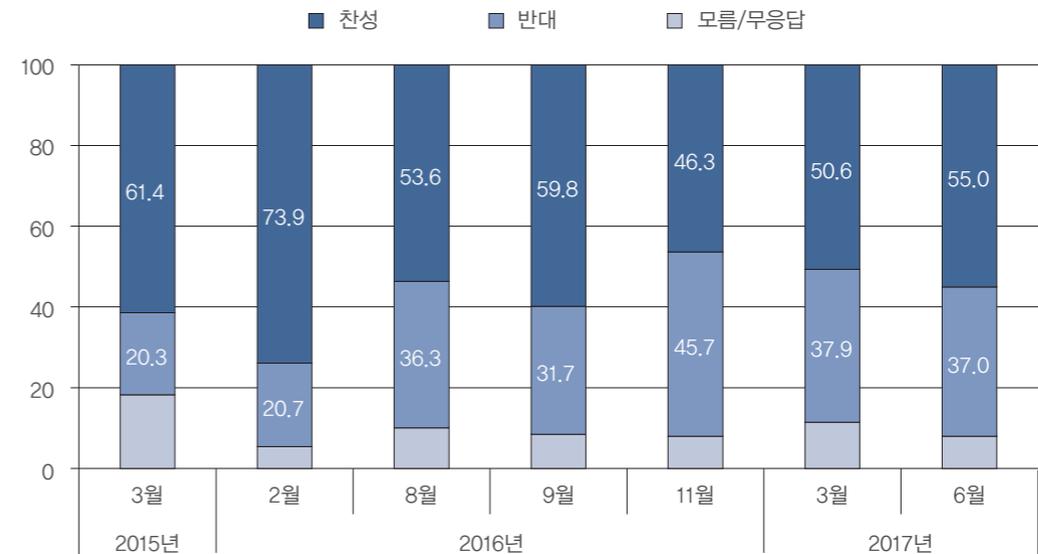
6.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정기조사(조사기간: 2017년 6월 1~3일).

가 국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2016년 7월(8일) 전후로 총 7차례 사드 배치 관련한 한국인의 의견을 조사하며 국내 여론 변화를 추적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 내 찬성 의견은 2016년 2월 73.9%로 가장 높았다(반대 20.7%). 북한의 4차 핵 실험 직후였기 때문에 찬성 의견이 유달리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당시에는 사드 배치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으므로, 찬반 진영의 격렬한 논쟁이나 주장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정치적 입장보다는 북한의 핵실험이 찬성 여론 형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7월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공식 발표 후, 사드 배치 문제는 정치권 갈등으로 비화됐다. 8월과 9월 조사에서 찬성이 각각 53.6%, 59.8%로 반대 의견보다 높게 나왔다. 하

[그림 5]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인의 의견⁷ (단위: %)



7.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정기·기획조사(조사기간: 2015년 3월 18~20일, 2016년 2월 10~12일, 8월 16~18일, 9월 21~23일, 11월 22~24일, 2017년 3월 6~8일, 6월 1~3일). 조사에는 “2016년 7월 한미 양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데 합의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을 이용했다.

지만, 2016년 11월 국내 여론은 찬성 46.3%, 반대 45.7%로 팽팽히 나뉘었다. 당시 한창 불거지기 시작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에 대한 한국인의 불신이 치솟았고, 그렇잖아도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논란이 됐던 사드 배치에 반대 여론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사드 배치에 찬성한 한국인의 비율은 2017년 3월 50.6%, 6월 55%로 다시 늘었다. 2016년 11월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사드 배치 찬성 의견이 50%대를 회복하며 반대 여론(6월 37%)과 격차를 벌렸다.

여론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50대 이상 고연령층은 전체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던 2016년 11월을 제외하면 정세 변화와 관계없이 찬성 의견을 유지하는 편이었다([표 2] 참조). 2015년 3월 조사 이래 50대, 60세 이상은 적게는 50%대 후반에서 많게는 80% 초반 가량이 사드 배치에 찬성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시기별로 입장을 달리한 연령층은 20, 30, 40대였다. 예를 들면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6년 2월에는

[표 2] 연령대별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 의견 변화⁸ (단위: %)

	2015년	2016년				2017년	
	3월	2월	8월	9월	11월	3월	6월
전체	61.4	73.9	53.6	59.8	46.3	50.6	55.0
20대	63.8	77.5	46.0	56.3	43.7	44.3	54.1
30대	53.3	66.0	41.8	40.0	34.6	32.9	42.7
40대	54.5	68.4	44.6	56.3	35.6	40.3	44.6
50대	68.9	74.7	60.3	67.8	56.0	56.0	59.9
60세 이상	66.3	81.7	70.9	74.0	58.6	73.0	69.6

8.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정기·기획조사(조사기간: 2015년 3월 18~20일, 2016년 2월 10~12일, 8월 16~18일, 9월 21~23일, 11월 22~24일, 2017년 3월 6~8일, 6월 1~3일).

20대 77.5%, 30대 66%, 40대 68.4%가 사드 배치에 찬성했으나, 2017년 3월에는 각각 44.3%, 32.9%, 40.3%만이 찬성했다. 무려 30%p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전 조사에 비해 2017년 6월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와 30대의 의견이 찬성 쪽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2017년 3월에 비해 사드 배치 찬성 의견이 20~30대에서 10%p 가량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55%까지 증가했다. 과거 안보이슈에 보수적 태도를 보여 온 20대의 움직임은 자연스럽다 하겠지만, 진보적 성향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 가장 높았던 연령층인 30대도 찬성쪽으로 크게 움직인 점은 예의주시할 일이다.

추가로 사드 배치에 찬성, 반대하는 이유를 함께 물었다. 2017년 6월 사드 배치에 찬성(550명)한 이유로는 '북핵·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므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70.3%). 북핵 문제와 최근 들어 찾아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한미동맹 강화('한미동맹 강화가 중요해서' 13.2%), 중국 견제 효과('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8.5%), 현실적 불가역성('현실적으로 돌이킬 수 없어서' 6.6%)을 선택한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이와 달리 사드 배치에 반대한 응답자(370명) 중 가장 많은 45.1%는 '여론수렴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를 반대 이유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비용부담 등 새로운 논란거리가 생겨서'가 21.7%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부담 발언이 반대 여론의 단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중관계가 악화되고 있어서'(12.2%) 등의 이유도 있었다.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은 사드 배치 자체보다는 주로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로 인해 형성되고 있었다.

사드 배치 국회 비준 필요성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해 왔다. 최근에는 사드 발사대 6기 중 4기의 반입사실 보고 누락사건이 터지면서 또 한번 이슈가 됐다. 이후 문 대통령은 국방부에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지시했고, 지난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사드 연내 배치는 사실상 무산됐다. 북핵·미사일 위협이 급박한 상황이므로 사드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었다면, 현 정부는 충분한 논의과정과 절차 없이 시급하게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지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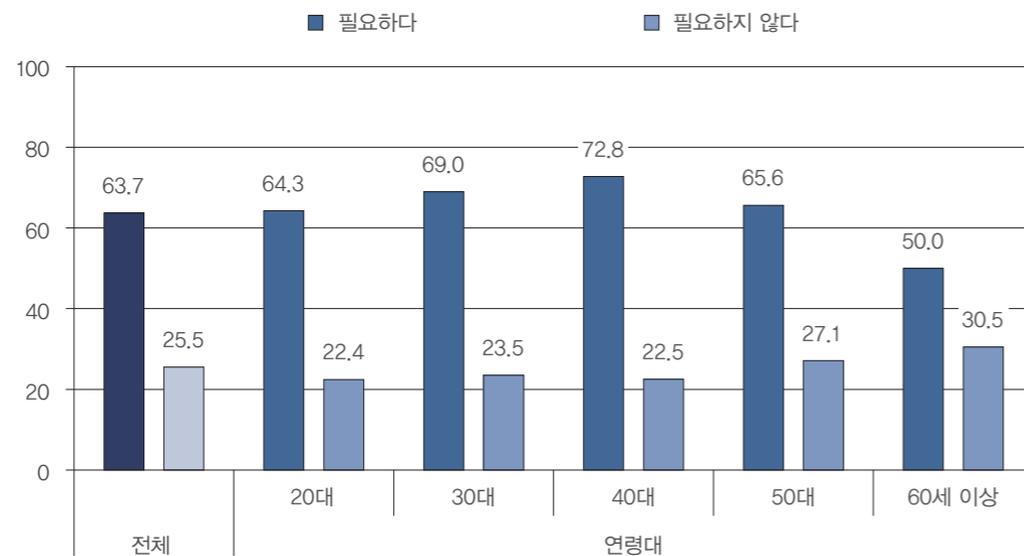
여권과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 사드 배치 국회 비준에 대한 한국인의 의견을 물었다.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3.7%로 다수가 찬성하고 있었다. 반대로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5.5%로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40대에서 72.8%로 가장 높았고, 30대 69%, 50대 65.6%, 20대 64.3%의 순으로 높았다. 60세 이상은 연령대 중 가장 낮은 50%만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30.5%)보다 훨씬 높았다.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연령대와 관계없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으면서도 한국인 중 다수는 절차상으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었다.

사드 배치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637명)는 주로 '도입 당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50.2%)라는 이유를 들었다. 급작스러운 배치 결정 발표와 국정공백 당시의 사드 체계 반입, 보고 누락사태 등, 박근혜 정부의 부채가 넘어온 셈이다. 다음으로는 '비용 부담 등 새로운 논란거리가 생겨서'가 15.8%로, 트럼프 대통령의 1조원 비용 부담 발

언이 국회 비준 찬성의 원인이 됐다. 그와 비슷한 비율로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해야 하므로' 15.1% 등을 이유가 있었다. 반대로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응답자(255명)는 38.8%가 '북한의 핵 위협이 시급해서'를 이유로 들었고, 다음으로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줄 것이므로'(21.6%), '현실적으로 돌이킬 수 없어서'(19.9%) 등의 순으로 이유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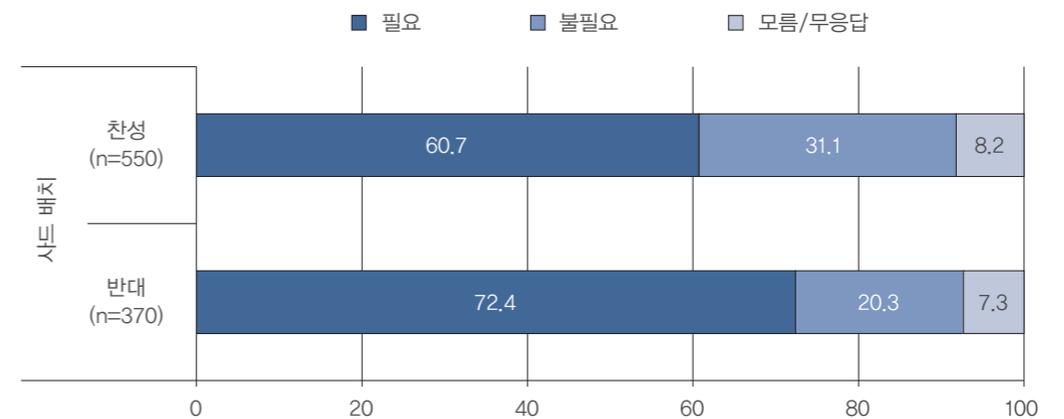
흥미로운 점은, 이번 조사에서 사드 배치 찬성 비율이 55%로 높았지만 이보다 많은 다수가 국회 비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사드 배치 찬반에 따른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했다([그림 7] 참조). 사드 배치에 반대한 응답자는 전체보다 높은 72.4%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에 찬성한 응답자 중에서도 다수인 60.7%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사드 배치 찬반 입장과 관계없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 특히 사드 배치 관련 비용에 대한 태도는 앞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 및 국회 비준 여부 논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6] 사드 배치 국회 비준 필요성⁹ (단위: %)



9.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정기조사(조사기간: 2017년 6월 1~3일).

[그림 7] 사드 배치 입장별 국회 비준 필요성 평가¹⁰ (단위: %)



10.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정기조사(조사기간: 2017년 6월 1~3일).

3. 대북(對北) 문제 접근법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연이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6·15 선언 남북 공동행사 재개, 5·24 조치 해제 등을 언급하면서 과거와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보수 정권에서 중단됐던 민간교류도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기조하에 승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북한이 민간단체의 지원과 방북을 거부하면서 정부의 남북관계 복원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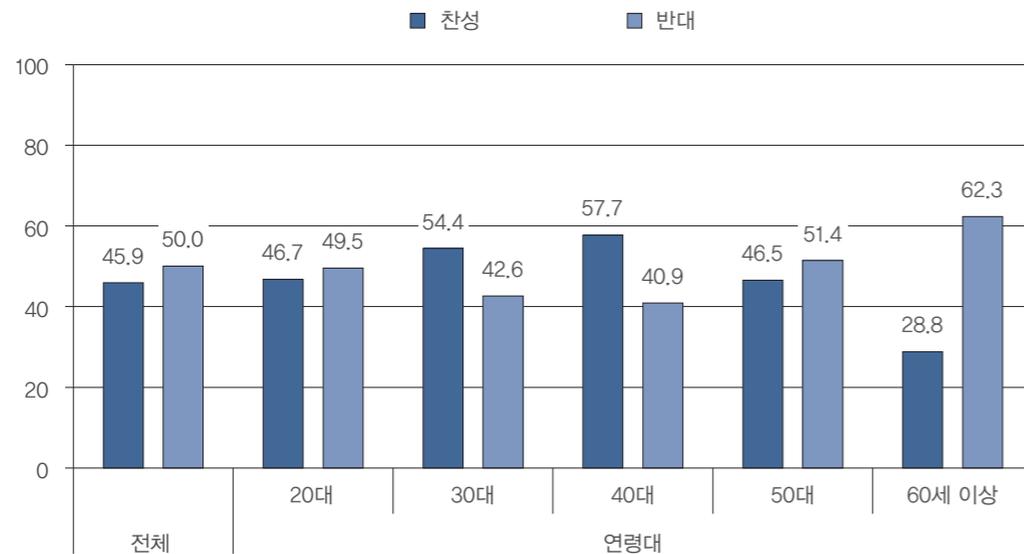
새 정부 출범 이후 최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 협력사업을 재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특정 입장이 우세하지 않았다. 찬성 45.9%, 반대 50%로 찬반간 차이가 오차범위 내였다. 그러나 연령대별로는 차이를 보였는데, 30~40대에서 개성공단 재개에 찬성하는 의견이 각각 54.4%, 57.7%로 절반을 넘었다. 이와 달리 안보에서 보수적 태도를 보여온 50대와 60세 이상은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하는 비율이 각

각 51.4%와 62.3%로 높았다. 20대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입장이 찬성 46.7%, 반대 49.5%로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견에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71.6%로 ‘남북관계와 무관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25.9%)을 압도했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 대북제재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에 있어 보수적 접근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보수 정권과는 달리 압박과 함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북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만,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매우 강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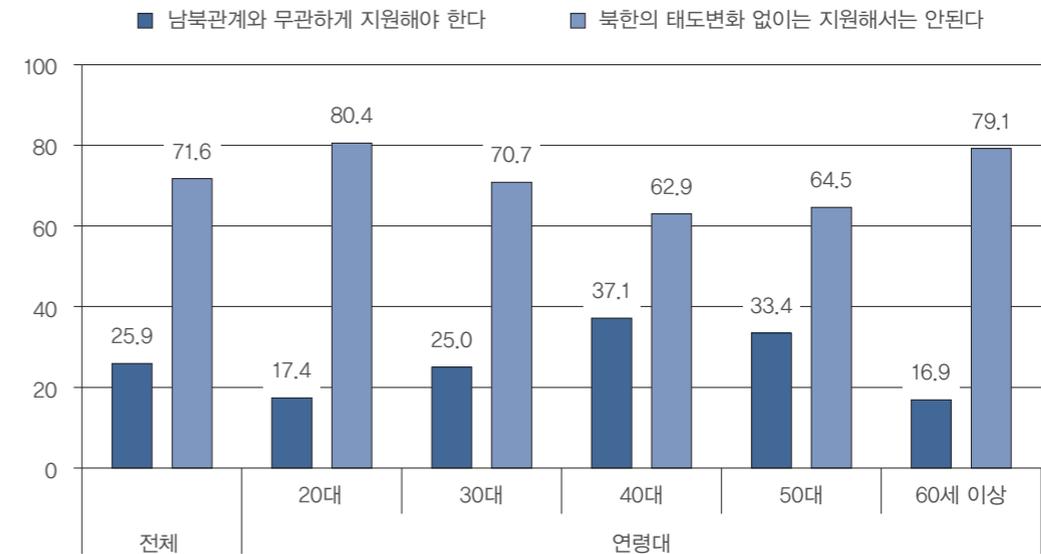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의 무력도발이 지속됐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입장이 더 보수화 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인도적 지원에 앞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하는 접근이 모든 연령대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안보이슈에서 보수적 태도를 갖고 있고 북한과 민족적 접점이 가장 적은 20대(80.4%)가 제일 강경했고, 60세 이상(79.1%)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반대로 남북관계와 무관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40~50대에서 각

[그림 8]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의견¹¹ (단위: %)



11.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정기조사(조사기간: 2017년 6월 1~3일).

[그림 9]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견¹² (단위: %)



12.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정기조사(조사기간: 2017년 6월 1~3일).

각 37.1%, 33.4%로 전체 평균(25.9%)보다 높았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III. 새 출발점에 선 한미관계

1. 한미관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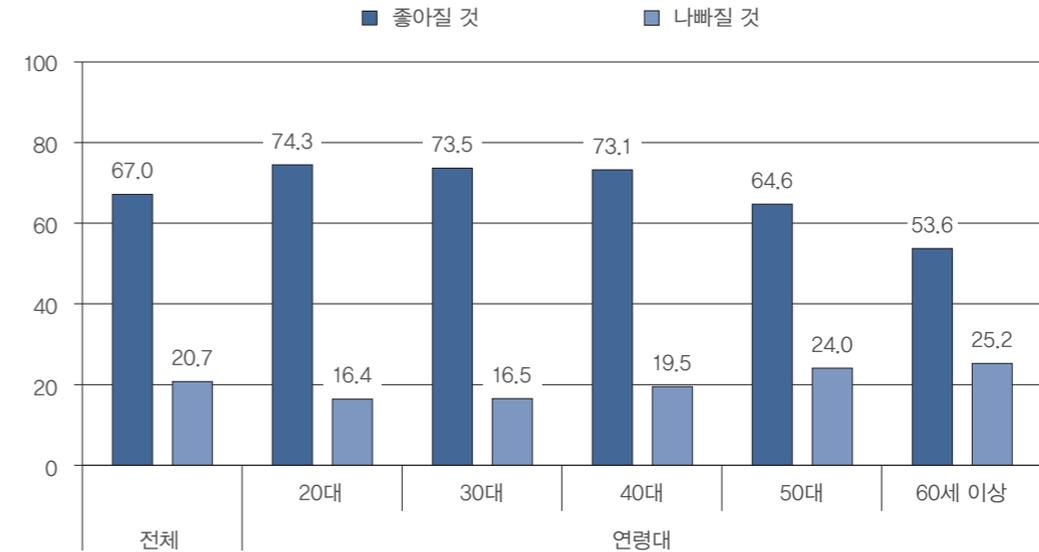
2017년 6월 29일,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 이후 첫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양국 정상의 첫 만남인 만큼 두 정상 간 친분을 다지고 양국 간 이해를 높이는 것이 1순위 목표고, 많은 한국인도 이에 대한 기대가 있다.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논란이나 워비어 사망 사건 등 불안요인이 존재했지만, 다수의 한국인(67%)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부정적 전망은 20.7%로 긍정적 전망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령대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적 전망이 부정적 전망을 압도했다. 낙관적 전망은 20대 74.3%, 30대 73.5%, 40대 73.1%의 순으로 높았고, 보수층인 60세 이상은 가장 낮은 53.6%가 한미관계를 낙관했다. 이와 달리 부정적 전망은 60세 이상 25.2%, 50대 24%의 순으로 높았다.

2016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한미관계를 우려하는 시각이 64%나 났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매우 획기적인 변화다.¹³ 불과 7개월 사이 한국인이 한미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또 한미관계를 낙관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도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달랐다. 2016년 11월에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부정적 전망이 높았던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고령층의 부정적 전망이 높았다.

13. 김지윤·강종구·이지형 (2017). “트럼프 시대 한미관계: 우려 속의 한국 여론과 시사점”. 이슈브리프,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의 본문 [그림 2]에 제시된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번 6월 조사와 설문 문항의 응답지에 차이가 있었다. 당시 응답지는 ‘좋아질 것’, ‘나빠질 것’, ‘차이가 없을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림 10] 문재인 정부 한미관계 전망¹⁴ (단위: %)



한미관계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한미관계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응답자의 문재인 대통령 호감도(0~10점)는 8.20점으로 매우 높았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전망한 응답자의 문 대통령 호감도는 5.56점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 호감도와 기대가 향후 한미관계도 잘 풀어나갈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이 있었다.

추가로 향후 한미관계가 나빠질 것으로 본 응답자들(207명)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최근 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를 꼽은 비율이 40.5%로 가장 많았고, ‘북핵 등 대북문제 접근법’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4.8%로 적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방위비분담금 추가부담 문제’ 11.6%, ‘한미 FTA 재협상 문제’ 9.9% 등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관계가 나빠질 것으로 본 한국인들은 사드 배치 문제와 대북문제 접근법을 잠재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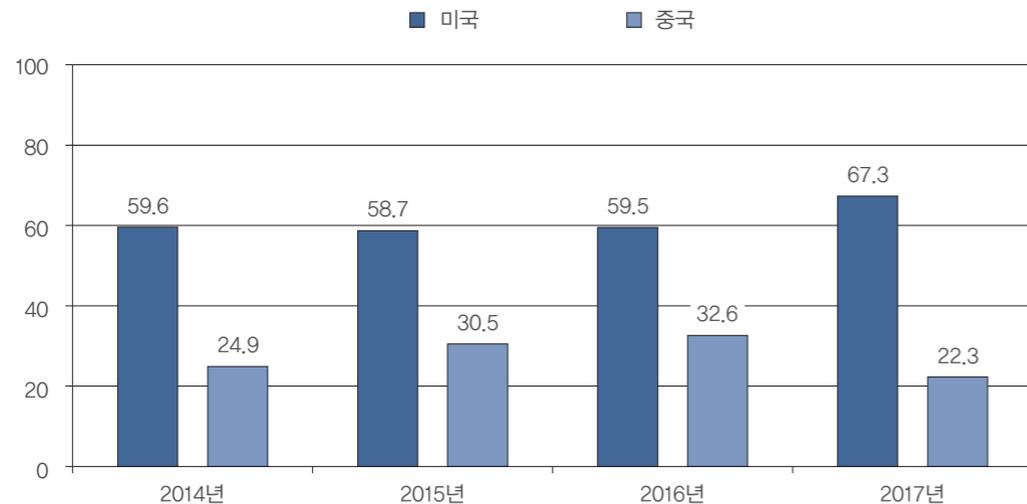
14.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정기조사(조사기간: 2017년 6월 1~3일).

2. 한국의 협력 상대

아산정책연구원은 2014년부터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가 지속되면 향후 어느 나라와 협력관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반복적으로 조사했다. 중국이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급부상하며 동북아에서 미국과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되면서 한국인의 전략적 선택이 어떻게 달라져왔는지를 추적했다.

최근 들어 미국을 협력 상대로 보는 한국인이 늘었고,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을 선택한 비율이 67.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은 22.3%로 최저치였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을 꼽은 비율은 최저 58.7%, 최고 67.3%로 중국(최저 22.3%, 최고 32.6%)보다 항상 높았다. 박근혜 정권 당시 한중관계가 순항하며 한국인의 대중(對中) 인식이 좋았던 때에도 중국보다 미국을 선택한 한국인이 훨씬 많았다. 중국을 선택한 한국인의 비율은 2016년 32.6%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17년 6월에는 오히려 22.3%까지 줄어들며 최저치가 됐다.

[그림 11] 한국의 협력 상대¹⁵ (단위: %)



15.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정기조사(조사기간: 2014년 3월 13~15일, 2015년 3월 11~12일, 2016년 3월 22~24일, 2017년 6월 1~3일).

2017년 중국을 선택한 한국인의 비율이 전년대비 10%p이상 감소한 것은 사드 관련 경제 보복조치 등이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중국이 4~5차 핵실험 후 북핵 문제를 푸는 데 협조적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간 갈등과 중국의 보복조치는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을 중국보다 중요한 협력 상대로 인식하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중경쟁 속 한국인의 전략적 선택이 연령대별로 어떻게 달랐는지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을 선택한 비율이 각각 최고치를 기록한 2017년 6월, 2016년 3월 조사 결과를 비교했다. 1년 사이 미국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연령대는 20대로 2016년 57.9%에서 2017년 74%까지 약 16%p가 상승했다. 다음으로는 40대에서 상승폭이 컸다(10.1%, 2016년 49.7%→2017년 59.8%). 과거 중국에 상대적으로 높은 호감도를 보여온 40대조차도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크게 기울고 있었다.

[표 3] 연령대별 한국의 협력 상대 (단위: %)

	2016년		2017년	
	미국	중국	미국	중국
전체	59.5	32.6	67.3	22.3
20대	57.9	35.1	74.0	20.7
30대	61.4	33.9	63.9	26.9
40대	49.7	41.3	59.8	27.6
50대	59.5	32.6	64.3	25.5
60세 이상	68.2	21.6	73.8	12.7

나가며

미국은 여전히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였다.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는 오바마 전(前) 대통령뿐 아니라, 시진핑 주석보다도 낮았다. 트럼프 호감도가 낮았음에도 미국 호감도는 안정적 패턴을 유지했다. 이는 중국 호감도가 사드 보복조치로 지난 3월 크게 하락해 최근

까지 과거 수준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미국과 중국의 호감도 변화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여론이 상당히 견고하다는 점이다. 이는 한미동맹에 기초해 구축된 양국 간 신뢰, 미국의 강한 소프트파워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낮은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로 인해 미국 호감도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그러나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동맹과 방위비 분담금,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된 부정적 언행이 계속된다면, 이것이 미국 호감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동맹에 도전이 될 현안에 대해선 사안별로 의견이 달랐다.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은 북한의 무력도발이 지속되면서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았다. 그러나 사드 배치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해선 다수가 지지했다. 박근혜 정부의 급한 사드 배치 결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던 탓으로 해석된다. 이는 많은 한국인들이 사드 배치를 한미동맹보다는 배치 절차와 관련된 국내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사드 배치를 하게 되더라도 국회 비준이 정당성과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은 대북(對北) 유화노선에는 조심스러웠다. 오히려 강경노선을 지지하는 편이었다. 과거 남북(南北)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선 찬반이 분명히 나뉘지 않았고, 인도적 지원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대북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대북제재 국면에서 선불리 대북 유화정책으로 선회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는 북한의 도발 등에 의한 한반도 정세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한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현안에 대한 복잡한 태도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는 더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적 전망이 부정적 전망을 압도했고, 많은 한국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신뢰관계 구축을 우선시할 것을 주문했다.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 한반도 사드 배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미 FTA 재협상 등 시급한 현안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향후 협력 상대로 중국보다 미국을 선호한 조사 결과는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유효하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한미 관계에 긍정적 함의를 갖는다. 앞으로 한미 간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한국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외교 능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유대관계 형성을 기대하고 있다.

부록: 조사자료

아산 정기·기획조사 조사개요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3.1%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전화인터뷰 조사
 조사기간: 보고서 하단의 각주 참고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A S A N
R E P O R T

새 출발점에 선 한미관계:
대미(對美) 여론과 한미관계 시사점

발행일 2017년 6월

지은이 여론연구프로그램

펴낸곳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03176)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등록 2010년 9월 27일 제 300-2010-122호

전화 02-730-5842

팩스 02-730-5849

이메일 info@asaninst.org

홈페이지 www.asaninst.org

편집 디자인 EGISHOLDINGS

